# 산업용 전기요금제 적용땐 전남광주 연 4천250억 절감

**특별시, 정부 'kWh당 13-18원 인하' 환영**

**여수 석화 2천355억·반도체 팹 9천936억↓**

**전력 경쟁력 활용 기업 투자·일자리 연계를**

정부가 최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이 시행되면 전남광주 산업계에서 연간 최대 4천250억원의 전력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에 의하면 전남과 광주가 포함된 남부권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행보다 kWh당 13-18원 낮아진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지역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이를 환영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과 원가 부담으로 어려운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여수 지역 산업용 전력사용량 약 1만3천81GWh에 요금 인하 폭을 적용하면 연간 약 1천700억-2천355억원의 전력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남광주에 6.3GW 규모 반도체 팹이 조성되면 연간 63TWh의 전력이 필요하다. 요금 인하 시 연간 7천176억-9천936억원의 전력비 절감이 기대된다.

여기에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여건까지 갖춰지면 첨단기업 유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통합특별시는 내다봤다.

특별시는 "전력다소비 첨단산업은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 공급 여건이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전남광주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높은 전력자급률을 바탕으로 이번 제도를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할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의 전력 경쟁력을 차별화된 투자유치 강점으로 활용해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정부의 최종 요금 설계에 지역 주력산업과 산업위기지역 등 산업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대규모 전력수요에도 대비해 계획입지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송·변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산형 전력망 확충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유현호 산업실장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전력 생산 지역의 가치를 산업 경쟁력으로 바꾸는 중요한 정책 전환"이라며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전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지역소득으로 이어지는 지산지소형 산업생태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광주 내년 재정인센티브 5조…혁신성장 초석

**韓총리 주재 '1차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민형배 시장 "지역주도 성장 책무 다할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년 재정인센티브 5조원을 지원 받는다.

31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열려 2027년 5조원 재정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확정하는 등 전남광주의 초광역 혁신성장 초석을 쌓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9명,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 민간위원인 도시개발·지방분권·교육자치 분야 전문가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는 한성숙 총리와 정부위원 16명,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민간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원위 운영세칙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심의했다.

지원위 운영세칙은 앞으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법령상의 운영 관련 규정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재정인센티브의 경우 2027년 전남광주특별시의 성공적 안착과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총 5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것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형배 시장은 4조3천5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관리하며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나머지 6천500억원은 전남광주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연계해 지원받을 예정이다.

통합특별시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설치·운용 근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되면 매년 기금운용 실태를 점검받게 된다.

한성숙 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부여하기로 약속한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정부가 통합특별시의 성공에 대한 책무가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과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민형배 시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전남광주 통합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 선도모델인 만큼,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지역주도 성장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인센티브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지역 발전 기반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수희 기자

# 전남광주시 "광주비엔날레 '대만 파빌리온' 논란 사과"

**참여기관 협의 미비 조사·후속조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 변함없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1일 제16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명칭 논란과 관련해 "참여기관 간 소통이 충분하지 못해 발생한 논란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날 사과문을 내 "파빌리온 참여기관 협의 절차상 미비점을 포함해 행사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상 차질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파빌리온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시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발맞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만 파빌리온' 명칭에 대해서도 "예술 영역에서 참여 예술가들에게 맡겨진 표현일뿐 특별시와 광주비엔날레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앞으로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과문은 '대만 파빌리온'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중국 측의 반발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통합시가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공식화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변은진 기자

# 전남광주 교육정책 특례·개선 과제 '특별법'에 담는다

**교육청, 누리집서 개정 의견 수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통합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누리집에 게시판을 개설하고 상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는 현행 특별법의 교육 분야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전남광주 교육 발전에 필요한 특례와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교육공동체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제안 분야는 ▲교육자치 확대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학교 및 교육행정 현장의 제도적 어려움 해소 ▲'교육지산지소' 실현 방안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인재 양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특례와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의견은 전남광주교육청 누리집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 의견' 게시판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게시판은 상시 운영하되 현재 진행 중인 특별법 개정 일정에 맞춰 오는 9월11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개정안의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접수된 의견은 향후 개정 과제로 관리·검토할 예정이다.

전남광주교육청은 특별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소관 부서와 함께 제출된 의견의 법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 검토한다.

이를 통해 선정된 교육 분야 개정 과제는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와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발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교환합시다/웃돈드릴게요]

○ 구미 삼성전자앞 상가건물/융무/월세468만원(월수익10%)
현금5억6,300+물건에따라 웃돈1억에서5억까지 가능
[반값 급매물]
○ 유동 대지56평 5층건물 210평 주차4
급매2억9,800(사옥,원룸,이벤트사무실최적)
○ 지산동 법원옆 큰길 대지44평 3층 83평
화물승강기1대, 주차2대
법조사무실최적 급매4억1,800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228-0990, 010-4601-139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